



2019 세가지 키워드로 본

한반도의 길

1.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전망
2. 북한사회와 주민의 일상생활
3. 평화경제의 비전

우리 시대 최고의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中
(2019. 9. 24)



2019 세가지 키워드로 본

한반도의 길

와바르히키

1.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전망
2. 북한사회와 주민의 일상생활
3. 평화경제의 비전



우리 시대 최고의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2019 세가지 키워드로 본
한반도의 길

목차

#1.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전망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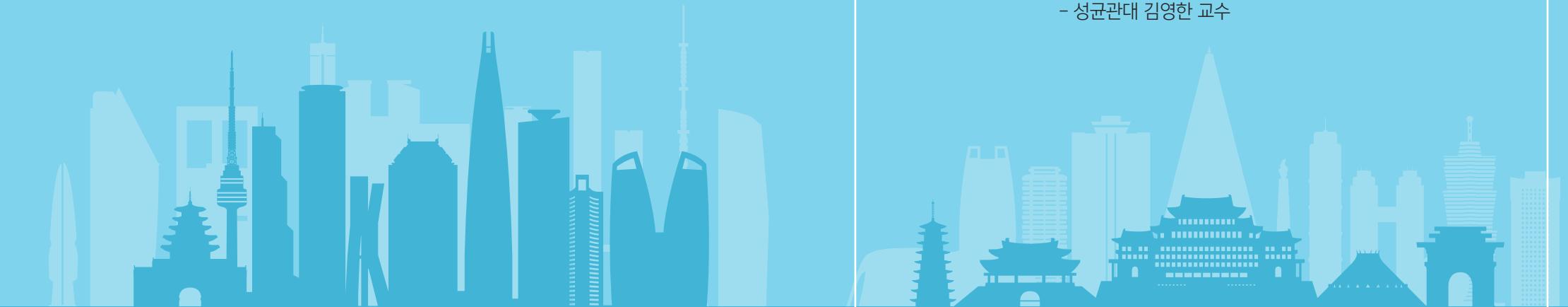
- 통일교육원 차문석 교수
- 한동대 김준형 교수(現 국립외교원장)
-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

#2. 북한사회와 주민의 일상생활 ... 43

- 통일교육원 정은찬 교수
- 동아대 강동완 교수
- 뉴스1 서재준 기자

#3. 평화경제의 비전 ... 69

- 송실대 이정철 교수
- 경남대 임을출 교수
- 성균관대 김영한 교수





대담자
소개



용경빈 / 대담 사회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전임교수
• 전 TBS 아나운서, YTN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 진행

#1.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전망



차문석 교수 / 통일교육원
• 북한연구학회 이사
•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임
•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준형 교수 / 국립외교원장
•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 센터장 역임
•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항지환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역임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임
•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 박사

#2. 북한사회와 주민의 일상생활



정은찬 교수 / 통일교육원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역임
• 저서 : '북한경제, 시장화와 불평등' 등
• 원산경제대학, 2003년 탈북



강동완 교수 / 동아대학교
• 부산하나센터 센터장 역임
• "통일의 길을 묻다" 행사 주최
• 저서 : '평양 밖 북조선' 등



서재준 기자 / 뉴스1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3. 평화경제의 비전



이정철 교수 / 송실대학교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분석지원 위원 역임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역임
• 저서 : '북한경제개혁연구' 등



임을출 교수 / 경남대학교
•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
• 통일부 남북회담분야 정책자문위원 역임



김영한 교수 / 성균관대학교
• 한국통상정책포럼 위원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조교수 역임
•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전망



차문석 교수
통일교육원



김준형 교수
한동대학교



황지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오늘은 국제정치와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웃나라 정세를 살펴보면서 통일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인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어서오시죠. 반갑습니다. 일단은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텐데요.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형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국제정세를 정의하는 단어를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에 의해서 국제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기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주의, 두번째는 시장 경제, 자유무역이고 세 번째가 안정적인 국제정치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을 보이다가 지금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이야기들이 학계나 국제정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동요가 있다는건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주의 국제질서 근본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흔들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라는 기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트럼프라던지 푸틴이라던지, 시진핑이라던지. 스트롱맨이라고 하죠. 리더십이 있지만, 철저적 민주주의는 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조금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것은 자유무역 질서는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고 내부적으로 경제문제가 생기니까 자유무역보다는 자기 국가의 이익만 챙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국제정치인데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긴장상황이었어도 냉전이구나 하고 안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면서 미국은 약해지는 반면, 중국은 치고 올라가는 등 전체적으로 불안정

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많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지금을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군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초불확실성, 어떤 분들은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뉴노멀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이 심화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가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인간 보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2차 대전의 원인 중의 하나가, 각국이 자기 것을 챙기다가 서로 관세를 올려서 관세전쟁까지 가고, 결국 서로 피해를 입는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



게 하는 것과 협력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꾸준히, 여러 국가들이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지환 교수님,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초불확성,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조금 뜯어보면, 세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레벨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미중간의 갈등과 경쟁도 예측하기 어렵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보통국가화 문제나 중국의 부상, 한중관계 한일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반도 내

에서의 남북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따로따로 각각의 어떤 동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맞아 떨어져야 동북아지역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의 흐름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외전략을 고민할 때 글로벌한 수준에서 변화되는 것과 동북아 수준에서 변화되는 것, 남북한 관계에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연하자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형성이 되었고 미국이 그걸 주도를 했죠.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미국이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번영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에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이 승리한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21세기에

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확실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럽지역에서도 유럽연합이 20세기에 많이 발전되면서 통합되어왔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민 문제나 테러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20세기에 형성해왔던 통합과 협력의 흐름들이 많이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동북아지역에서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치적인 발전이나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각 국가들이 서로 발전하고 부상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냉철하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리스크를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교수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네. 21세기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 이야기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붕괴된 시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인권, 민주주의, 자유적 가치에 의해서 꿈을 이루기도 했고, 또 그것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그것이 자명한 국제질서로 갈 줄 알았는데 많은 대륙에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형태를 띤 나라들이 나타나면서 확실성이 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20세기 국가들 중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보편적인 가치의 혜택을 많이 받은 국가이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했죠. 21세기 들어와서 여러 개도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여전히 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이 더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인류사회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라든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은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들을 제어하고 중립화시키는 한국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한국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은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면서 강한 미국이 먼저다 해서 표를 많이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정세는 어떤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황지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1990년대나 2000년대에는 동북아정세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동북아 지역이 번영하고 있었거든요. 2010년대 들어와서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경쟁하는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재균형 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적극 대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미국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질서를 유지하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국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니까 국제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것이 취약해진 것이죠. 그런





공백을 중국이 파고들려고 하고 있고 부상하면서 미·중 경쟁구도 같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역시 오바마 행정부 시기 재균형 정책에 이어서 트럼프 정부도 인도태평양 정책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재균형 정책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지역까지도 연결시키면서 중국을 에워싸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면서 ‘태평양은 두 강대국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이고 중

국이 미국이랑 정면 대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 실크로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일대일로 정책을 취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은 계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을 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밀어내려는 중국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국과는 중국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대국과 굳이 전면전을 펼친다는 입장보단 물러나서 챙길건 챙기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중국이 많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경쟁하는 한편 G2라고 하고 과거에는 차이메리카라는 단어도 쓰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봐도 미국의 군사비가 중국에 비해 서너배 정도 많고요. 이미 미국은 국방에 투자된 부분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의 군사비는 전세계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국경 주변인 아시아지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삼분의 일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치고 빠지기 전략,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태면요, 미국이 동북아국가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지리적으로는 동북아가 아니죠. 그렇다보니까 지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 국력이 약해진 데 비해서 중국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결국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한국, 일본 같은 동맹

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중국을 에워싸야 하는 거죠. 중국은 에워싸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치고 나가고 있고요.

4가지 지점 정도에서 부딪히는 데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동중국해라고 그러합니다. 중국은 조우위더, 다오위다오 또는 일본은 센카쿠라고 하죠. 중일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대만, 양안입니다. 그 밑에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남중국해입니다. 이렇게 네 선을 이으면 떠오르는 중국과 막으려는 미국 사이에 패권의 경쟁선이 일어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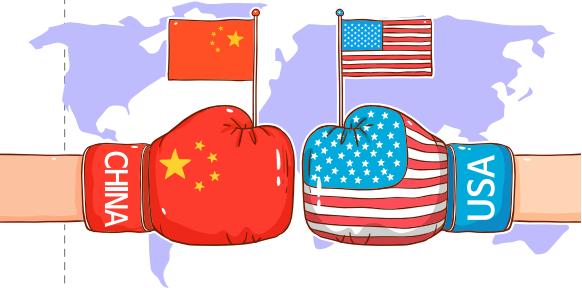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교수님.



미국의 입장은 중국이 생각하는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방해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경제규모 1위 국가로 성장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 이 자부심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중국몽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중국몽의 구체적인 방식들은 미국이 세계규

칙을 만들어 놓은 역할들을 중국이 대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미국의 퇴행으로 인식하는 것 같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경제적, 안보적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앞세우고 있죠.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전략도,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인도태평양 전략도 그렇고 기본적인 대중국 견제전략은 동일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던 관세전쟁 같은 경우에는

강력했죠. 관세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세계적인 정치무대에서 미국이 했던 역할을 중국이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던가 중국의 패권 다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동북아 지역 일본이나 러시아는 어떤 입장으로 봐야할까요?



일본의 핵심적인 전략구조는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일동맹의 기본적인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핵심적인 것이고요.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동북아 전략은 대중국 견제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세력들이 평화헌법을 수정함으로써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동북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입장이죠?



러시아는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부상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유라시아주의, 신동방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유라시아주의라는 것은 기존에 러시아가 유럽에서 강대국이었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은 시베리아나 아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강대국을 꿈꾸는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에서 정치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해가 걸려있다고 보는 관점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방정책은 19세기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동방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푸틴대통령이 2012년에 <블라디보스톡의 꿈>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 발전의 중심을 극동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신동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동방정책은 유라시아주의와 결합됨으로써 러시아가 기존에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을 재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몽과 비슷한 거죠?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는 강한 러시아만 있다가 요즘은 프렌들리한 입장인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강한 러시아라는 입장 하에 강력한 제도를 이야기 해오다가 최근에 이를 바꾸는 측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느낌의 전략으로 바꿨는데요. 잘사는 러시아라고 해서 실리도 챙기고 안보 이익도 챙기는 실용적인 외교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문

제도 해결하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동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새로이 거듭나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한편,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경제발전 집중도 하고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입장만 들어봐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정세 속에 한반도의 정세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의 희생으로써 한국전쟁을 겪었고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90년대에 다행히 냉전체제가 전세계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우리만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해결이 안 된 채로 남겨져 있다가 30년을 또 왔습니다. 그 사이에 소련이 러시아가 됐고 중국이 부상을 하고, 냉전체제는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에는 냉전이 뼈대만 남아있는 셈이 되는 거죠. 북중러라는 삼각구도는 과거보다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한미일이라는 우호국들도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과거처럼 적대시 정책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나빠지면 한미일 대북중러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냉전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구조 자체가 한반도 분단이 가져오는 성격 때문에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잘 겪었던 게 뭐냐면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우리 전쟁의 위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고 미국은 전쟁을 할 것처럼, 2017년에 사실상 냉전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평화의 과정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거를 보면 미중이라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하방압력이 한반도에 작동을 하고요. 밑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냐, 남북이 다시 긴장상황에서 전쟁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당연히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게 맞지만 그쪽으로 가기에는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화해모드로 끌려져 가는 상황인거죠?



2018년 이후에는 한반도 정세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9년 이후에도 지속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북한 스스로 미국, 일본이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안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그런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때 이후에 평창올림픽 남북연합 단일팀도 이루어졌고, 대북특사도 있었고 남북정상회담이 10여년



만에 개최되었고요.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북미 정상이 2-3번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중사이에서 경쟁이 첨예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그 사이에서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국들에서는 화해의 분위기를 보고만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어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상 몇몇이 견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요. 4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후 올해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아쉽긴 하지만 결렬이 되긴 했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만 있다면 동북아 질서는 새로운 변화요인을 맞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중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중국은 특히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북한에 지원 노력을 해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중국이 그런 측면이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격화된 양상을 보이는 미중간의 경쟁 질서에서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2016년 7월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했던 것이 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한중 관계가 동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하면서 양국 관계는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죠. 이 합의를 하면서 양국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게 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패턴을 맞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미일간의 군사·안보적 협력체계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안보문제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또한 한미 안보체계가 미국이 동



북아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한일간의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라던지 역사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경제문제까지.



일본이 근본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역사적 사과 없이는 한일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나갈 수 없다고 보고 있죠. 이 문제는 한일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면서 한일관계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벌어졌

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는 기존 한일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적인 요소를 만듦으로써 한일관계가 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에 우리와 수교한 이래 20여 차례 정상회담을 해왔습니다. 양국 간에는 큰 틀에서 보면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한러 관계는 약간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한러관계는 복원되거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약속하는 그런 관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크게 보면요, 한반도 분단이 해소되거나 북미가 화해를 하게 되면 동북아 전체지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훼손되거나 자기들이 패싱되는 것들이 불안한 겁니다. 가장 불안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모든 안보상황을 미국에 의존해왔는데 트럼프가 등장하고 보니까 미국이 일본을 버리거나 중국이 커지거나 미국과 중국이 친해지거나 하면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미중이 나쁠 때, 남북이 어려울 때 정상국가로 가서,



미국이 떠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빨리 구비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한테 가장 유리한 것은 과거의 냉전체제와 같은 적대관계거든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에게 들어올래? 아니면 한국조차도 우리에게는 우호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정해진 질문은 아닌데요. 제가 드러보면 그러면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던가 회복에 있어서 지금 얘기해주신 강대국들 가장 큰 관심사는 뭐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동북아정세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것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를 반영한 것이었죠. 그것 자체가 당시에 20세기에 동북아 정세를 형성시킨 측면이 있고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전체가 한국 위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한반도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대외전략을 짜거나 경제발전 전략을 짜는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러시아 역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극동시베리아지역을 개발



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한반도가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가 될 것인가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한반도가 더 커진 한반도, 8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 한반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견제를 하려는 모습이 많아서 현 상태에서 보면 주변 강대국들이 어느 국가도 한반도가 빠르게 통일되길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공공외교적인 측면에서 주변 국가들이, 주변국 국민들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을 자기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김에 여쭙보죠. 한반도의 비전과 통일전망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모든 국가들이 현 상황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게 미중갈등과 한반도의 평화 또는 통일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지각변동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현재 주변국 권력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상 긴장된 상황을 내부적인 권력강화에 이용하는 리더십입니다. 보면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의 평화가 주변국가들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안정적이다, 한국은 통일이 되더라도 대결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로 간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설득시켜야하고 우리 자체도 그런 생각을 가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국가들에게 미래상황이 큰 물음표이지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아니 더한 고민을 하죠.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는 있지만,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관성이 생기고 안정감이 있다 보니 평화로 가는데 있어서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삶을 다 바꿔야 하고,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2017년에 봤듯이 우리의 미래를 전쟁의 위험 속에 둘거나, 아니면 결단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간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외부적으로 이를 잘 설명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결속력이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불안감이 해소가 되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황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동북아를 논의할 때, 미국과 중국이 세력 경쟁을 하고 또 일본도 적극적으로 보통국가화를 논의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동북아가 보다 안정되고 합리적인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는, 평화의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도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과거부터 북방정책이나 남방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아시아에 대한, 동북아시아에 대한 개념들을 발전시켜 왔고요. 또 동북아 책임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면서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상호 협력의 지점을 만들고자 하는 가치중심적 개념을 제시했죠.



그런 관점에서 신북방정책이나 신남방정책들이 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협력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경쟁만을 생각하면 소위 하드파워라고 얘기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간 갈등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 동북아질서가 불안정해지는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 측면들,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에 다자적인 협력을 꾀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의 철도공동체라든가요. 아니면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 원자력과 관련된 협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동안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노력을 행한다면 주변국들도 상당히 많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동북아 책임공동체의 그러한 목표가 상당히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안보적인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상당히 양면적인데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으로 아시아에서 자기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일대일로, 미·일은 합동정책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이죠. 그 중간에 우리가 딱 놓

여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세력군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우리를 찢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서 이것들을 연결시키면서 동북아의 경제협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구상입니다. 그게 동북아 책임공동체고요. 여기 필수가 뭐냐하면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예



늘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는 북한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 길을 뚫어야지, 남북이 공존을 해야지, 이 세 가지를 묶을 수 있고 가교를 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야간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반도를 보면 북한 지역은 거의 보이지 않고, 어둡고 이제 한국과 중국 동북 삼성 지역과 일본은 굉장히 밝은 모습이죠. 한반도가 반도인데 한국이 섬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북한지역에 공백기가 생긴 것이죠. 이런 북한과 남북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



동북아의 협력을 이루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해보면 어느 하나 쉽고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나가며 안팎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 통일이라는 목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이뤄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그 방법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와 한반도 통일 전망 201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북한사회와 주민의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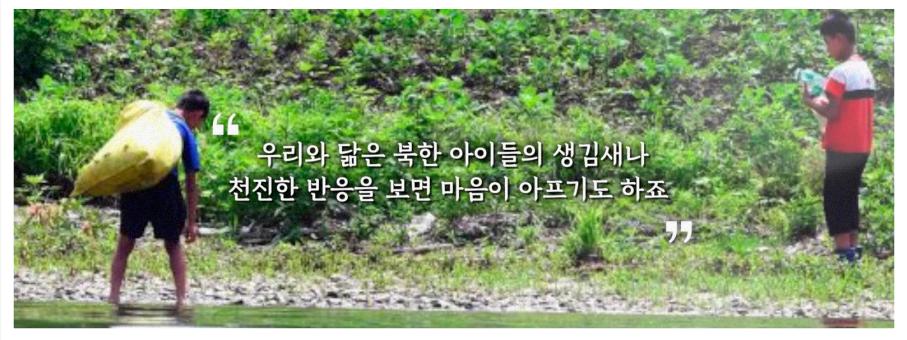
정은찬 교수
통일교육원



강동완 교수
동아대학교



서재준 기자
뉴스1



“ 우리와 닮은 북한 아이들의 생김새나
천진한 반응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



제가 개성이나 금강산 갔을 때 만났던 아이들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외모나 하는 말은 당연히 똑같고, 행동하는 방식, 표정 짓는 거, 저희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남북한이 사실 굉장히 가까이에 있지만 우린 북한을 잘 모르잖아요. 그 작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 습관도 달라졌고 또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는 사회를 바라보는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 북한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가 평소에 통일이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평화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실질적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과 연관된 분들을 모시고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북한주민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집단주의, 이 자체를 대하는 북한주민들의 태도나 관점이 이완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정은찬 교수님께 먼저 여쭙을까요?



북한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북한사회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북한사회는 어떤 특징을 띄고 있는지 설명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집단주의’를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북한사회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노동당, 권력기관을 거쳐서 주민사회까지 이어지는 획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경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경제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주의 대(大)가정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아버지이고, 당은 어머니로, 대중을 자녀로 매칭시켜서 최고지도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의 삶의 방식 변화입니다. 북한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제도에 기초하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어, 국가공급제도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평등분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1990년대 중반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배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하고, 자립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변화가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주민들의 집단주의적 가치관들을 바꾸는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자립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변화에 더해,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03년에 시장운동을 공식화하면서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덕분에 장마당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장마당, 우리말로로는 시장이라고 하죠. 경제난 이전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의 지시를 따라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장마당을 우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당이 제일 중하면 어느 당이 중하냐? 장마당이 중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서 시장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생존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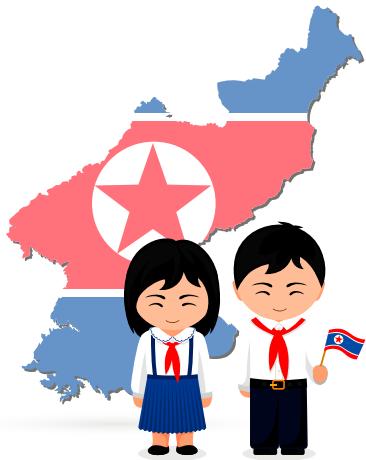


정은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북한과, 지



금 실재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고민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의 대가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단어가 ‘장군님 식솔’이라는 단어입니다. 북한의 노래 중에 ‘행복한 내나라 하나의 대가정’이라

는 가사가 나오듯이, 아버지 수령과 당과 자식이 늘 함께 있고 장군님 안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배급제가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북한에 시장이 있다고 하시고 북한에 두 개의 당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노동당 하나는 장마당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북한을 요즘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접경에서 바라볼 때 저 역시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배급제가 거의 붕괴가 됐고, 사람들이 장마당에 가서 사고 팔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흔히 잘 아는 나이*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아디** 이런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입고 심지어는 디즈니캐릭터가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님 중국 단둥에 가보시면 신의주를 바라보면서 ‘100억대 돈을 찾아라’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고.



접경지역이 아무래도 경제가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수성가로 부를 수 있는 사업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건물, 토지, 그런 것들을 매매하면서 재산을 불리고 있다는 것이 타당하고 또 실제로 이 분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황 같은 것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언론에

서 확인하고 싶어 하죠.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100억대 돈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단독의 건물을 짓고 있는 100억대 돈주.



한번 모시고 싶네요 급히.



최근에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분들이 중국 쪽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장사를 나오세요. 개인장사차. 이 분들에게 들어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극소수 1퍼센트 미만의 신흥부자들, ‘돈주’라는 사람들이 금융자산이 거의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추정되었었는데 지금은 100만 달러를 가진 극소수의 신흥부자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신흥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는 본인 개인의 자산만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중국 쪽으로 나온 화교분이 말한 거라서 일부분은 팩트일 것 같지만 세부사항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개인 자산이 한 3분의 1정도, 권력층이 위탁해서 운영해달라는 돈이 3분의 1정도. 중국 쪽에



서 들어가는 자본이 3분의 1정도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백만달러 정도를 유통하는 신흥부자가 출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다보니까 놀라운건 건물이 매매가 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북한을 볼 때 정치적인 부분, 지도층의 변화라든가, 군사적 부분, 미사일 발사 등을 눈여겨보지만 변화의 핵심은 경제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지도층이 가진 경제의 힘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의 힘은 사실 막기 어



렵습니다.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바라봐야하는 것이 최근에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안의 사업 체제를 삭제했어요. 그런 변화들은 선대에 대한 거역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경제부분의 변화를 통해서 신흥부자가 등장하는 게 놀라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생각해야하는 부분이 빈부격차가 생겨날 거라는 점입니다. 굶어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지적인데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부자들도 있고, 반면에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우리가 장마당하면 이렇게 상설로 펴놓고 아주 큰 규모의 시장을 상상하기 쉬운데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장도 있지만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걸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북한주민들이 많이 먹었던 두부밥, 인조고기밥. 인조고기밥을 여전히 시장에서 사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평양 대동강 수산시장에 가면 철갑상어 같은 굉장히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중 접경지역에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평양에 있으면 머리 깎으러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언론에서 보면 평양에서 대부분 좋은 미용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골분들은 어디에 가서 머리를 할까요?



집에서 엄마가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 건 아니죠. 시골 마을이었는데 아주 허름한 창고 뒤편에서 아주 세련된 옷을 입은 미용사가 그 지역주민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들 곱슬과마하는 것처럼 머리를 말고 수건을 뒤집어쓰

고 말리고 있는데 미용사가 입고 있던 가운이 세계적인 브랜드 로레*. 그걸 입고 머리를 손질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왔던 탈북민들은 미용사가 미용을 해주면 그냥 옥수수수를 조금 받았다 하는데 지금은 돈을 받는 거죠. 예전에는 머릴 손질해주고 옥수수 같은 식량을 받아갔다면 지금은 자기 기술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의 변화는 시장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3년 북한 주민들의 생존장터로 열린 시장은 소비재시장입니다. 전국 각지의 400여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강동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부격차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를 축적한 개인들이 자본시장과 임노동시장과 여러 가지 암거래를 통해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권력층들과 유착되어 있어서 개인 수준에 더 많은 부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북한의 시스템입니다. 생존이 너무나 어려운 계층이 있는가하면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고요. 휴대폰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북한에서 650만대의 휴대폰이 활용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이 넘는 건가요?



650만대는 한사람이 2대를 가질 수도 있고, 3대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은 안 됩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 상행위를 할 때 핸드폰으로 오더를 내리고, 유통업자가 움직이고, 돈을 중계하는 돈장사가 폰으로 모든 걸 주고받는 상황들이 확산되면서 시장에



서 부를 축적하는 현실에 플러스효과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을수록 입이 다물어지지 않도록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꽤 우리 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북한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상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또는 사회상의 변화를 제도가 악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 돈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한 초기단계에서는 북한 지도계층에서 사회변화를 억압하려고 하는데, 변화는 물리적으로 막기 힘들기 때문에 변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권력층과 유착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이 변해야 하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인 개혁 동력은 찾기 힘들고 북한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부적인 힘이 개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체면문화, 북한에 체면문화가 있는데.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북한 또한 마찬가지죠. 통신으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폼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더 좋은 폰을 밑수로 구해서 갖고 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또 중요한 게 그 폰이 문화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통신은 안 되지만 외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작은 변화들이 북한 전체 변화로 될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동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문화교류, 위로부터의 남북한 교류와 문화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적인 주민 변화를 주목해볼 때 한계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입는 욕구가 분출하게 된 거죠. 메이드인 코리아를 찾거나 명품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문화 콘텐츠를 외부사조에 중점을 두고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굉장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외부문물을 선호하는 욕구가 엄청납니다. 처음에는 외부문물을 호기심으로 보지만 다시 보면 모방하게 돼요. 모방하게 되고 모방단계를 넘으면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인식까지 생기게 됩니다. 외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교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경제적인 변화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견인되고 문화적인 변화에서 궁극적으로는 가치관이 체제의존보다 개인, 가족, 돈 중심으로 전환되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인식 변화까지 견인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가진 한계가 있는데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게 차단되어 있잖아요. 북중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



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륙지역은 제한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문화교류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이 좀 더 외부 문화를 알 수 있는 창이 열려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 내부에도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경제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서 우리 자본도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의 유인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에 물어볼 질문을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 했는데, 오늘 세 분과 말씀을 나누다보니 북한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목말라있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우리와 많이 비슷하고 닮아 있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아마 관심일 것 같습니다. 변화의 과도기, 이중경제, 이런 표현들은 하나의 모습으로 북한을 재단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싶은 북한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되, 함께 누려야할 것은 북한주민들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와 인권이 있는 통일조국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비취 얘기를 해보면,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프로파간다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빠르게 소비가 됩니다. 물론 개인의 힘으로써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한 정보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개인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언론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측



면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뉴스 콘텐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 번 비운 상태에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정관념이죠.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비워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뉴스 말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몇 가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이 있어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요새는 저희 같은 언론인들도 다양한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각종 정보 사이트에 가면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만 가도 선택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치게 TV나 뉴스만 나오는 것만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종일관 우리는 관심으로 시작해서 관심으로 맺어야 할 것 같네요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많지만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서 북한 내부적인 하나의 현상을 전체적인 북한이라고 이해하는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양면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과 시각을 스스로 확립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은 남북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겠지만 상호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적 통합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통합을 준비해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회통합은 마음의

통합이기 때문에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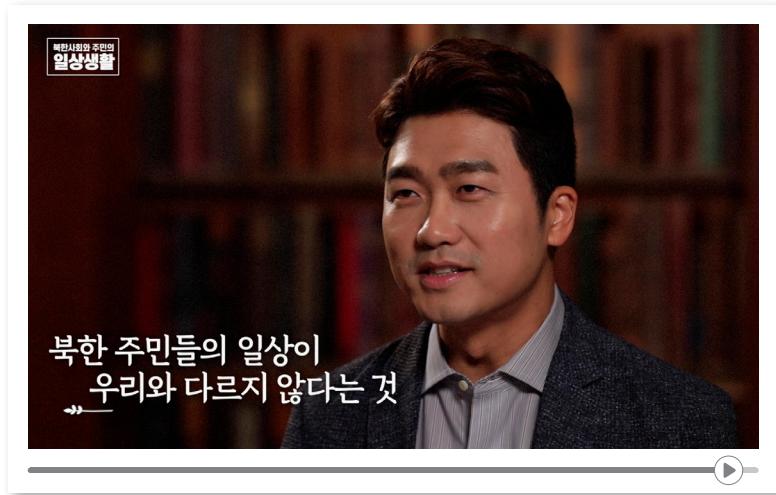
고정관념도 줄이고, 색안경도 벗고 마음을 열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인 만남, 세기의 만남이라고 표현을 했고 북미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일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과 남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만나는가. 남북한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길을 놓는 게 만남이니깐요. 이런 만남이 잦아질수록 남북한 교류협력도 진척되고 북한주민들의 변화, 북한사회의 변화, 다 같이 바라는 통일조국의 미래까지 꿈꿔 보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의 첫걸음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2019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제의 비전



이정철 교수
승실대학교



임을출 교수
경남대학교



김영한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이 초래한 많은 비용을 언급하며 분단 극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했죠.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져가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비전인 ‘평화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이 분단이 된지 어느새 70년이 넘게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분단의 배경, 분단으로 인한 제약사항 같은 것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쭙 볼까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남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사실상 분단체제가 만들어지고, 특히 6.25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이 같은 분단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계속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는 분단체제 아래서의 경제 발전도 가능했는데, 지금 상황은 분단체제 아래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성장 동력의 고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중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흔히 ‘섬’ 경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섬처럼 갇혀있는 경제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되는 것이고, 성장 동력을 찾는 데에 있어서 ‘평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고요. 그리고 저성장 기조가 구조화 되어 있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해 발전 역량이 제약되어 왔는데, 만약 남북 관계가 잘 된다면 이런 분단 상황의 제약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저성장 기조, 이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남북관계, 평화 등을 주목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미·중간 무역전쟁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전쟁, 표준전쟁, 금융전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남북 간의 새로운 협력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과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반드시 우리에게 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정철 교수님?



정부는 평화가 지속되면 공동번영이 이루어지고, 그게 지역 협력으로 확대된다는 철학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왔죠. 그래서 작년에는 역사상 유래 없는 1년 안에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6.30.)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정부가 접경지역에서도 ‘DMZ 평화의 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평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움직임을 경제적인 효과와 엮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화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정부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평화가 지속되고, 토대가 깔리면 그걸로 경제협력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경제협력이 지속되면 공동번영이 이뤄지고, 공동번영이 이뤄지면 더 큰 평화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의 철학이고 그게 ‘평화경제론’입니다.



실제 한국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분단이 지속되고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게 됐는데요. 환율도 분단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해외자본조달 금리도 불이익이 생기고, 주식 가격도 저평가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합니다. 그런데 평화가 지속되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죠? 그게 우리가 평화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소득일 거고요.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겁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해외 자본들이 한반도에 눈을 돌리고 투자가 활성화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철도, 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들도 활성화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구상해왔던 가교 국가, 교량 국

가, 이런 구상이 아마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러시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전통적인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에 더해서 신북방,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까지 확장시켜 거대 경제권을 주도하는 그런 미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평화 경제론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영한 교수님 북한도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북한 경제가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뭔가 탈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소위 평화경제 아젠다가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북한도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경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지정학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한반도 긴장 감소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천문학적인 비용감소 효과, 그게 우리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일부 시장 경제요소 도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체제 불안감이 커지는 와중에 체제위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평화경제라는 틀을 통해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발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북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한 기초과학 기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첨단 산업 부분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남북한 간의 유기적인 협력 가능성들, 과거에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봤었던 놀라운 협력가능성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고 있기 때문에 그 골이 좀 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협력과 화해의 좋은 예가 있다고 하거든요. 선진 사례 중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경우입니다. 당시 필수 자원인 석탄, 철강을 공동 관리하는 경제적 연계를 통해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여 유럽 내 평화와 협력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아주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최초에는 자원협력으로 출발해서 최근에는

심도 있는 경제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갈등구조를 지속가능한 협력의 구도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간에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경제의 비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는 우리 남북한만의 평화가 아니라 주변국가, 전 세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한반도에 냉전이 오래도록 지속

되면서 남북한의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경제 협력도 상당히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평화경제 핵심 비전이 ‘상생과 번영의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런 평화경제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형성 되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쪽만 이익이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거든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의 경제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이익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결국은 우리만의 경제협력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북아 차원의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평화경제가 추구하는 또 다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인 과제가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한 분단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과 대륙, 남방지역까지 연결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출발점이 지난해 말까지 남북한이 합의도 하고 현지 조사도 했던 ‘철도’ 연결입니다. 철도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도로도 연결 될 수 있고, 통신 연결은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한반도가 연결이 됩니다. 한반도가 연결되면 이미 다른 나라끼리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정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교량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비전은 평화경제 공동체의 틀을 마련하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교수님 한 분 한 분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먼저 임을출 교수님께 한 번 여쭙볼까요?



우선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핵화협상이 진전되면서 대북제재가 완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평화정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평화라는 것은 문서라든지, 말

로써, 선언으로써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평화를 좀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남북한의 교류 협력, 물질·인적 왕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평화가 정착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구나’, ‘우리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남북한 신뢰가 만들어 지는 거고, 이 신뢰는 또 법·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출발점으로서 ‘종전선언’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궁극적인 종착점으로서 ‘평화협정’ 얘기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전협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를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집니다.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가 제도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통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평화가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지고 남북관계가 지속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상당 수준 만들어졌을 때에만 평화경제가 시작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함께 가야 되거든요. 선순환 얘기를 했잖아요. 평화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일정수준의 교류협력이 병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평화경제가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위험 불안요소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게 먼저라기보다는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이정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의 제도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지속가능한 평화 가 오면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를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구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은 일단 에너지, 자원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 경제벨트하고 산업과 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환서해 경제벨트, 그리고 DMZ를 포함 하는 환경·관광의 접경지역 경제벨트를 구상해서 남북 간



3대 경제벨트란?

- 환동해권: 원산·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 환서해권: 수도권,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
- 접경지역: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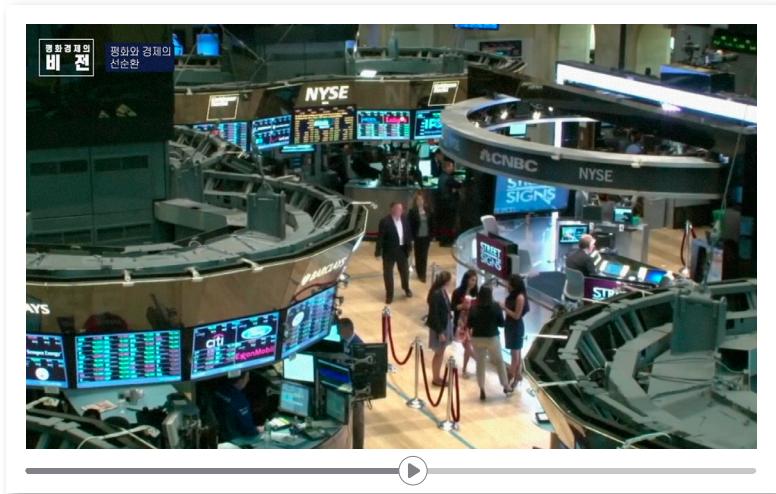
의 협력을 하고, 그 세 가지 구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입니다. 평화가 제도화 되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정착되면 비로소 하나의 시장, 하나의 경제권으로 정착되고, 그게 평화경제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죠.



네, 그 세 가지만 들어봐도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우리 김영한 교수님 의견은?



두 분이 말씀해주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경제협력의 기반, 지역경제 통합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교통, 통신 시설의 연결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있는 경제협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동북아 인근 국가들인 일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주요 자본 투자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자본투자, 기술협력, 경제협력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제시할 수 있는 고유의 기술적 경쟁 우위 구조

를 가져야 하는데, 그럴 때 지역경제협력 체제가 추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원 마련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아



주 강력한 경제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게끔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될 텐데, 가장 강력한 유인체계는 한국 경제가 가지는 기술적 시장지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제시해줄 수 있는 기술적 시장지배력이 없는 가운데서 시장만 통합되고 지정학적인 중요성만 강조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협력,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에 더해서 가장 본질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비교우위의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갖추려는 노력도 평화경제에 밀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라고 할까요, 기술적 비교우위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우리만의 경쟁력이 필요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결국은 가장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기대효과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남북협력이 잘 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평화경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경제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협력해 줄 것인가, 북한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이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요소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추격하는 게 아니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넘어서고 있죠. 그러면서 제조업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남북한이 협력을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력하고, 북한의 토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 우리 4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의 기초기술들, 그런



기초기술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분야에서도 남북한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화경제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 나라의 경쟁력은 이제 과거와 달리 특히 IT산업이 발전한 시대에서는 '네트워크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결됨으로서 생기는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단 때문에. 근데 남북한이 연결이 되면 네트워크 경쟁력이 살아나는데, 네트워크의 핵심이 철도, 도로, 통신, 가스같은 인프라·에너지 분야가 네트워크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평화경제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한반도는 한반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신북방 경제라고 해서 북방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최근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동남아 나라들이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과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경제의 효과가 북방지역과 남

방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평화경제에 갖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분단경제에서 성장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저평가 됐거든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저평가 됐어요. 주식가치도 계속 저평가됐거든요. 그런데 평화경제가 출발해서 정상궤도에 오르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이런 한국경제가 이제는 고평가되고, 가치를 제대로 찾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평화경제의 기대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정치·군사적인 장애물들, 제약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평화경제에 대한 저평가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시도를 하지 않는 거 하고,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해서 평화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바라보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적인 에너지를 모아보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설레네요. 이정철 교수님은 어떤 기대효과를 보십니까?



평화경제를 통일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통일 이전에 하나의 경제, 하나의 시장을 만들자는 전략이 중요한 거죠. 사실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 인구 8천만의 시장이잖아요. 중국 동북 삼성에 1억 이상의 시장이 있으니까 통일과 통합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경제권으

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형성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있죠. 기업과 국민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요. 이런 게 작동할 때 한국경제가 소위 신성장동력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8천만 이상의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에서 8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결과가 있고요. GDP가 글로벌 수준에서 7위권에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평화가 기본이 되는, 평화경제가 정착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은 다자간 협력에 대한 주도적 노력입니다. 동북아는 다자체제 경험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경제권이 되려면 남북, 중국, 러시아, 일본, 아세안까지 연결되는 경제권이잖아요. 그러려면 다자체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자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기대효과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체제를 유도하는 게 우리라고 보는 근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나머지 주변 4개국(미·중·일·러)은 다 강국들이잖아요. 강국들은 자기가 주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런데 남북은 소위 중견국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중견국가는 강대국의 정치행태나 외교행태와 다르게 중견국가들과 연대하고,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많이 하죠. 그 점에서 보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 수준도 그렇고 딱 ‘플랫폼’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죠. 그 플랫폼은 여러 나라가 동시에 진행하는 다자체제에 중심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하나의 시장,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끝으로 김영한 교수님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교수님이 희망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 잘 그려주셨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기반만 구축이 된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현실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제도적인 기반, 평화경제의 어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독일통일 이전의 협력과정들입니다. 독일은 과정이 무르익어서 통일이 되어 버리고 계속 정치적 통합을 이뤄져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



정과 비교해서 봤을 때 실질적인 평화경제가 한반도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한경제와 북한경제의 수준격차, 단순한 경제력 격차뿐만 아니라 기술격차, 전체적인 문화 격차까지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화경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열매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어떤 투자를 얼마만큼 해 왔는가, 실질적인 정책 노력들, 경제적인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 왔는지 심각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북한경제가 겪고 있는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

리가 북한 측에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파트너라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진정성 있는 투자와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그런 노력들이 이뤄지려면 더 중요한 게 우리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구조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얘기는 해 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화경제는 지금 정부만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권 때 북방정책이 나왔을 때도 특히 청년세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화경제를 달성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목표라고 보는 거예요. 평

화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경제협력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평화의 수준도 동시에 증진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평화경제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야 할 중요한 이정표라는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화경제는 남북한의 협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협력과 국제협력이 함께 진행되면 평화도 공고화되고 경제협력도 훨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북한으로 진출하고,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결국 기업의 한계거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업들이 직면하는 한계거든요. 이 한계를 극복



하는 평화경제는 희망이고, 그런 맥락에서 정치적인 문제도 잘 해결하면서 평화경제를 잘 성숙시키는 국민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평화경제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또 그런 이해가 필요한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평화경제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여러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됐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세가지 키워드로 본

한반도의 길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담당자 : 김수나

인 쇄 : 2019년 12월 10일

발 행 : 2019년 12월 16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인터넷 : <http://www.uniedu.go.kr>

전 화 : 02-9017-162

본 책자와 관련된 영상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unied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 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 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中
(2018. 8.15)